“양질의 일자리 감소… 90% 위한 노동법 만들어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토론회

정부 분배정책 실패 소득격차⬆ 소주성 폐기하고 ‘노동개혁’ 필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동료 의원 및 토론자들과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토론회의 제2차 토론회 ‘노동개혁 없이 경제미래 없다’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민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10%의 특권노동자에게 치우치면서 90%의 서민 노동자가 외면받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면서 소득격차도 확대됐다는 비판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토론회의 제2차 토론회 ‘노동개혁 없이 경제미래 없다’를 개최하고 “현재 문 정부는 민주노총에 휘둘리는 노동정책을 펼치며 전체 근로자를 위한 정책인 것 마냥 포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0%의 가진자를 위한 노동법이 아닌, 90%의 전체 노동자를 위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하며,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 문 정부 노동정책, 고용의 질↓ 소득격차↑

이날 발제를 맡은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되레 감소했다”며 “주 1~17시간 단기 근로자 수는 약 49만명이 증가한 반면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약 71만명이 줄었고, 2년 동안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고용률은 57.8%에서 56.6%로 1.2%포인트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용총량 또한 전 산업에서 약 24억(-3.9%) 시간이 감소해, 전 세계적인 산업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글로벌 역량을 가질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문 정부의 분배정책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1분기 실질처분가능소득은 2년전에 비해 전 가구에서 1.9%가 줄었고,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배율(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비율)은 5.35에서 5.80으로 0.45나 증가했다”며 “이는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 간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근로자 중심 노동정책 만들어야”

김용민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정책, 통상임금의 범위확대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미신에 가깝다”며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 노사간의 자발적인 근로계약에 우선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남김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 생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국내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자의 파업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노조의 막강한 힘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OECD 국가 중 우리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영업권을 대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쟁의행위 기간 중 참가자에 대한 대체근로가 자유롭게 허용돼, 노사관계가 시장기제에 의해 견제되고 균형된다”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스트 87체제를 구축해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중심의 노동기본권을 제정해야 한다”며 “대기업·공공부문 조합원인 10%가 중소기업·자영업자인 90%를 압도하는 기득권의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노총 등 노조 출신 정치가가 아닌 서민 노동자 중심의 노동정치를 확립해야 서민노동자를 위한 나라,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가 만들어진다”며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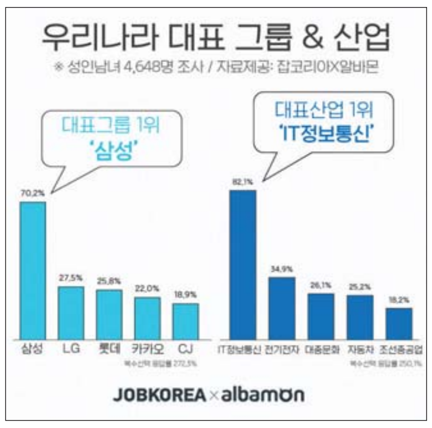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양산 쓴 관광객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상태를 보인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대표기업 1위 ‘삼성’ 2위 ‘LG’

성인남녀 4648명 대상 조사

산업, IT정보통신 〉 전기전자 順



우리국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삼성을 꼽았다. 우리나라 대표 산업으로는 IT정보통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는 알바몬과 함께 성인남녀 4648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집단(그룹사)과 대표산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5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4곳을 보기문항으로 제시해 복수응답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집단 1위는 삼성(70.2%)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삼성은 지난해 동일조사(81.5%)에서도 1위를 차지해 2년 연속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룹사로 꼽혔다.

삼성에 이어 LG그룹(27.5%)이 2위를 차지했고, 롯데(25.8%), 카카오(22.0%), CJ(18.9%), 현대자동차(16.5%), SK(13.1%), 농협(12.5%), 신세계(10.3%), 포스코(7.6%) 순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남성은 현대자동차를 여성은 카카오와 CJ를 우리나라 대표기업으로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 기업이 우리나라 대표그룹으로 꼽힌 이유는 ‘세계적인 제품력’과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그룹으로 뽑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여서’(55.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49.6%)라는 응답이 많았다.

/한용수 기자 hys@

“규제정비로 핀테크 유니콘기업 탄생 지원”

글로벌 핀테크 분석·개선방향 세미나

“세계 100대 스타트업 韓규제 적용땐 13곳 사업 불가, 44곳 조건부 허용”

주최한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최용민 한화손해보험 상무, 정인영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 조영서 신한금융지주 디지털전략팀 본부장,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나유리 기자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을 국내 규제환경에 적용해보니 절반 이상 불법이나 엄격한 허가요건을 거쳐야 했다. 이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맞춤형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금융위원회·자본시장연구원·핀테크센터가 주최한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샌드박스의 일시적 규제 특례를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고쳐나가겠다”며 “해외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로펌테크앤로(TEK&LAW)에 따르면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모델을 국내 규제 저촉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세계 100대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세워졌다면 13개 기업은 규제로 인해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고, 44곳은 조건부로만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들도 규제완화와 금융회사에 축적된 데이터 공유가 시급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 김태훈 대표는 “기존의 금융회사가 상품을 생산하는 데 집중했다면 핀테크 기업은 고객 접점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집중한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규제를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핀테크 기업이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대출상품을 판매하면 규제상 이들은 중개인이다. 중개인은 금융소비자에게 자문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핀테크 기업은 소비자의 데이터를 이용할 뿐 중개료를 받지 않는다.

/나유리 기자 yul115@

내달 1천억 규모 그룹 혁신성장펀드 조성

>> 1면 ‘우리금융, 혁신기업…’서 계속

이번 회의에서는 각 추진단별 올해 추진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룹사간 협업을 통해 혁신성장기업과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신지원추진단은 그룹사 관련 부서들과 함께 보증기관과의 연계지원 강화, 혁신성장기업 우대 및 맞춤형 상품 출시 등을 통해 혁신·창업·사회적 기업에 올해 5조4000억원 지원을 포함 향후 5년간 31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금융에 강한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그룹사간 협업을 통해 혁신성장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지원추진단은 우리종금 및 우리PE자산운용과 함께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그룹주도 혁신성장펀드 조성, 정부주도 혁신모험펀드 간접투자 등 혁신성장지원 3종 프로그램 중심으로 향후 5년간 2조1000억원을 혁신성장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우리종금이 출자하고 우리PE자산운용이 운용하는 그룹 혁신성장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 펀드에는 거래기업들까지 참여해 혁신성장기업 지원에 함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신제도개선추진단은 전 그룹사 여신정책, 리스크관리 조직이 참여해 일괄담보제 도입과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개선, 신기술·신사업 분야에 대한 심사역량 강화 등의 과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20년 간 기업에 금융을 원활하게 지원하면서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우리 경제의 돌파구인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홍민영 기자